



승광사 오색 연등 두동실~

부처님 오신날(5월2일)을 10일 앞둔 22일 밤 순천시 승광사 경내 연등 위로 내걸린 연등의 화려한 빛이 물에 투영돼 장관을 이루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전남 피해 불가피

“농업생산 15년간 1조3천억 감소”

전남도 추정결과 발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함에 따라 농도인 전남의 농업부문 피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한미FTA 비준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관세철폐기간 15년간 총 1조2천870억원, 연평균 860억 원대의 농업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비준안이 국회에 제

출된 지 19개월만이다.

박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FTA 비준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더 이상 질의할 의의가 없으면 비준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한다”며 가결을 선언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선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고 오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비준안은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날 비준안이 처리되자 ‘한미FTA 농업부문 피해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도 발표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전국 농업생산액이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6천698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축산업으로 연평균 4천664억 원 가량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유제품, 사과, 포도, 과채류 순으로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관세철폐기간 15년 동안 총 1조2천870억 원, 연평균

858억 원씩의 농업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농업생산 감소액은 전국 평균 감소액의 12.8%에 이른다.

각 부문별로는 축산부문 생산액이 연평균 607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과수부문이 155억 원, 채소·특작부문이 73억 원 그리고 곡물부문이 2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농도인 전남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분석자료를 기초로 분야별, 품목별 대응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盧前 대통령에 서면질의서 발송

대검 4·29 재보선 이후 소환할 듯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기에 앞서 22일 서면질의서를 먼저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사시간을 단축하고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직접 조사 전에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서면조사를 먼저 하

기로 했다”며 “가급적 주말까지 답변을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소환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A4용지 7장의 서면질의서에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건넨 돈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정상 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쟁점 등을 두루 질문 항목으로 담고 있다.

다만, 결정적인 내용은 소환조사 때 직접 묻기 위해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치일정과 관련 없이 노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소환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4·29 재보선 이후 한 차례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전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한 정상문 전 비서관을 이날 오후 불러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와 황령금 12억5천만원의 성격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6월 29일 박 회장으로 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정확한 경위와 작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도 등을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600만 달러가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이라고 보고 이를 뒷받침할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전결권을 쥐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해 11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꺼내 쓰고 지출 내역을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하는 점에 주목,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묵시·명시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진단, 5월단체 퇴거 강제집행 신청

법원 빠르면 주중 철거... 충돌 우려

5·18 단체들이 법원의 농성장 자진 철거 명령에 불복함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이 22일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추진단은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

당 부지 내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농성 중인 5월 단체가 설치한 농성 전막을 제거하고, 5월 단체를 퇴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강제 집행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또 법원의 명령 위반에 따라 1일 50만원을 부과하는 것도 포함했다.

법원 집행관들은 빠르면 이번 주 중 농성장을 방문, 법원의 가져본 결정 내용을 5월 단체들에게 공시한 뒤, 농성전막 철거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5·18 유족회, 부상자회는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북구 건강복지타운’ 의혹 광주시 진상 조사 나서

북구청 “관내 부지없어 우산근린공원 내 확보”

‘북구 건강복지타운 의혹 투성이’ 보도(본보 4월22일자 1면)와 관련 광주시 북구청은 관내 부지가 없어 모든 시설물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산근린공원 내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북구 청소년수련관을 보완하거나 단독주택지 매입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2억 원의 토지매입까지 들어가며, 지하 시설물 설치 불가피한 부지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북구청은 부지 인근이 인구 밀집지역이고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선정 이유로 설명했다. 실제 이 인근은 말바우시장과 동광주 불계이트 등으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 정체지역으로, 오히려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건강복지타운 성격에 맞고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영장 등이 들어서는 북구 건강복지타운은 북구청의 주장과 달리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와는 상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광주 유치 가 확정될 경우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산구 수완지구에 국제 규격을 갖춘 수영장을 신축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에 북구 건강복지타운 내 수영장을 국제 규격으로 만드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며 “3급 공인 수영장은 국제 규격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U대회 유치 결정 시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구청은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지하 1·2층에 3천㎡ 면적의 3급 공인 수영장, 목욕탕 등 편의시설, 헬스장과 에어로빅장, 주차장을 포함한 건강타운과 보호치료실, 단기보호실 등 아동복지관을 연면적 7천795㎡(부지면적 1만487㎡) 규모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북구청은 해당 부지의 지형이 낮은 만큼 대규모 터파기 없이도 124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한 부지 내 터파기를 통해 2개 층의 건물을 얹힌 뒤 다시 흙으로 덮는 등 까다로운 공사 방식으로 최소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 북구청은 “과업지시서상 지상 2층, 지하 2층의 건물규모는 참여업체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기준(안)을 제시한 것이며, 자료 일체를 모든 참여 업체에게 제공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2일 평가에 참여한 한 교수는 “업체에서 법규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북구청에서 지침을 잘못 작성한 것은 사실이며, 그 부분이 평가를 하면서 논란이 됐다”며 “법규 위반에 해당되는 업체를 아예 탈락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평가 대상에는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있지만 설계 지침이나 과업지시서가 법규 자체를 어긴 것은 심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북구청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2일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며, 시설물 모두를 지하에 설계한 G사가 기초금액 5억7천900여 만원의 88%인 5억1천만 원을 써내 최종 낙찰됐다.

한편 광주시는 이 같은 북구 건강복지타운 의혹과 관련 진상 파악에 나서며,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꽃과 바다가 하나되는
천상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2009한남도국제꽃박람회 초대합니다.

2009 한남도국제꽃박람회
2009. 4. 24(금) ~ 5. 20(수)

www.chunghwa.or.kr